

칼럼 /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관계인구, 어촌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새로운 대안

일자: 2025-10-31 11:02

수정: 2025-11-03 09:20



우리나라 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어촌의 소멸위기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해수면 어가인구수는 8만3,963명으로 1980년의 72만5,134명 대비 64만1,171명(88.4%)이 감소했으며, 2020년의 9만7,062명 대비 1만3,099명(13.5%)이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어가인구가 매년 3,000명~4,000명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어가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는 8만명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어가인구 8만3,963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4만2,735명으로 어촌 인구의 고령화율은 50.9%로 나타났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2010년 23.1%에서 14년 사이에 2.2배 상승하였으며, 2024년 대한민국의 고령화율 20.0%와 비교할 때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이 증가하면서 어촌의 청·장년층(20세~59세) 인구는 2010년 8만9,762명에서 2024년에는 6만6,799명이 감소한 2만2,963명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 어가 인구의 감소는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 어업생산량 감소,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하락 등 어촌의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어촌 고령화율 50.9% 달해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귀어·귀촌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어촌의 청장년층 감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4년 귀어가구원수는 712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5년의 귀어가구원수 1,446명 대비 50.8%가 감소하여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24년 기준 청·장년층(20세~59세) 귀어가구원수는 487명으로 이는 2015년의 청·장년층 귀어가구원수 1,176명 대비 58.6% 감소했다. 귀어인의 절대적인 규모와 청장년층의 귀어규모가 동시에 감소한 것이다.

귀어·귀촌인구에 의한 어촌 인구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관계인구(關係人口)를 활용한 어촌의 공동화(空洞化) 문제 해결이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하거나 정착하지는 않지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귀어 예비자, 지역활동가, 도시 자원봉사자, 어촌 체험객, 원격근무자 등을 어촌의 관계인구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단순 관광객이 아닌 지역 주민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어촌의 일손 돕기, 청년창업 참여, 어촌살기 체험, 어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관계인구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는 관계인구 확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어(漁)케이션 프로그램, 어촌유학·대학 연계형 교육, AI 기반 맞춤형 귀어귀촌 매칭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4도(都) 3촌(村) 프로그램’은 도시민이 주 3일간 어촌마을에 머물며 일상적 교류를 경험하게 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며, ‘어(漁)케이션 프로그램’은 원격근무 환경을 활용해 도시근로자가 어촌에서 장·단기 체류하며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촌유학·대학 연계형 교육’은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어촌연계 체험과 지역문제 해결형 과목을 도입해 청년세대의 어촌 인식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AI 기반 맞춤형 귀어귀촌 매칭 시스템 도입’은 도시민의 역량과 선호를 분석해 적합한 어촌을 추천함으로써 관계인구의 실제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관계인구 유입·귀어귀촌 투트랙

관계인구를 어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거주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일자리의 확보이다. 어촌의 빈집을 정비하여 어촌에 장·단기 거주를 위한 공간 확보와 문화공간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을 선정하여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지원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어촌에서 일자리 창출시 어업활동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관광, 유통, 문화, IT 서비스, 사회적기업 등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인구를 활용한 도시민의 어촌 유입정책은 어업활동을 조건으로 하는 귀어정책과 어촌으로의 완전 이주를 조건으로 하는 귀촌정책과 비교할 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작은 대안이다. 어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생활하려는 도시민들이 부담없이 어촌 생활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촌에서의 생활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업 중심의 인구 유입 관점에서 벗어나 어촌이라는 공간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